

보도시점 2026. 7. 3.(금) 조간 배포 2026. 7. 2.(목)
2026. 7. 2.(목) 12:00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 3만 7천 명에게 맞춤형 서비스 연계

-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 운영성과, 점검 및 제도 개선 추진 -
 -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문가 등과 함께 제도 발전 방향 논의 -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개선 사항 집중 건의기간 운영(7.6~20., 2주간) -

【관련 국정과제】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3.27.) 100일(7.4)을 맞아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실적과 지역 현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와 개선 과제도 함께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방정부 및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제도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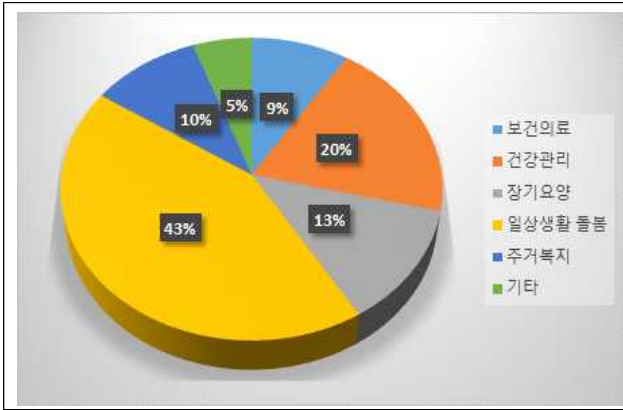
【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실적 】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신청·접수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현장에 안착 중이다. 통합돌봄 본사업(3월 27일) 이후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총 46,215명으로, 주간 평균 3,301명(일 평균 745명)이 신청하였다. (6월 26일 기준)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은 45,619명(98.7%), 장애인은 16,568명(35.8%, 고령 장애인 중복 집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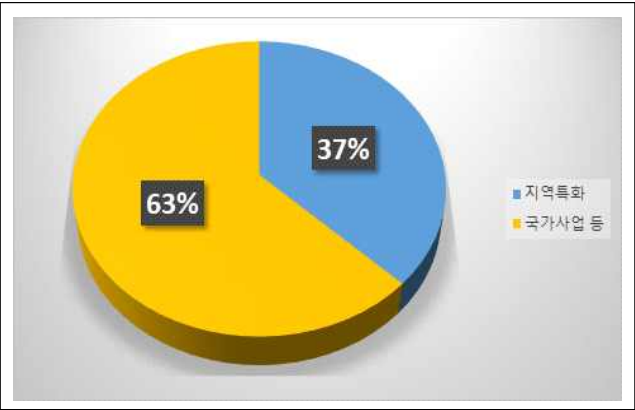
그 중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37,304명으로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연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 서비스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 일상생활돌봄(가사지원, 이동지원 등) 43.1%, ▲ 건강관리예방(치매전문관리, 정신건강관리 등) 19.7%, ▲ 장기요양(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12.8%, ▲ 주거

복지(중간집, 주거환경 개선 등) 10.1%, ▲보건의료(방문진료, 방문간호 등) 9.1%, ▲기타(안부확인 등) 5.3% 순이었다. 총 서비스 제공건수(123,595건) 중 국가사업 등이 62.6%, 각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개발한 ‘지역 특화 서비스’ (2026년 620억 원, 국비)가 37.4%로 46,257건이 제공되었다.

<서비스 분야별 비중>



<지역특화사업 비중>



한편 지역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 명당 ①신청자 수가 많은 지역은 전남·광주 93.3명, 제주 65.9명, 대전 53.4명, 전북 52.0명 등이고, ②신청자 수가 적은 지역은 울산 21.0명, 경기 25.2명, 인천 25.5명, 대구 33.4명 등이다.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현황(단위: 명)>



특히 신청자 수가 가장 많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읍면동 담당자가 75세 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가정을 의무적으로 방문해 통합돌봄 신청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는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우수사례로 꼽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가 단순 실적관리가 아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기반의 예산 지원체계를 도입하여, 매년 지방 정부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 주요 성과지표로는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사업운영 실적 외에도 이용자 만족도, 재가생활 유지기간, 요양병원 입원을 변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지역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체장의 노력 정도도 중점 살펴볼 계획이다.

【 현장의 변화 】

100일간의 제도 운영은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서비스를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전문가가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면밀히 확인,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A씨, 80대/남)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던 생활 지원사가 암 수술 후 건강이 악화되고 유일한 돌봄 제공자인 딸마저 암 진단을 받아 돌봄 공백에 놓인 대상자의 상황을 발견하고 통합돌봄으로 연계하였다. 통합판정조사를 통한 복합적인 돌봄 욕구 확인으로 대상자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가사, 병원동행, 식사 등 일상생활지원, 방문건강, 방문복약지도 등 건강관리,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살던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다.

경북 의성군(B씨, 70대/여)에서는 시각장애와 구강암 등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가진 노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자 마을 이장이 통합돌봄으로 연계 하였다.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방문진료, 방문간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는 물론 가사 및 활동지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주거 환경 개선 등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돌봄을 통해 현재 B씨는 지역 사회에서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대구 서구에서는 고관절 수술 후 퇴원환자 C씨(70대/남)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함께 거주하는 중증장애 배우자도 돌봄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부부의 건강상태와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방문진료, 틀니지원 등 보건의료, 방문

건강, 방문운동, 방문복약지도 등 건강관리, 장기요양(방문목욕), 식사지원, 병원동행 등 일상생활지원,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재가생활은 물론 배우자의 돌봄 공백까지 함께 해소하는 가족 단위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전남 영암군의 D씨(80대/여)는 골절 수술 후 퇴원한 독거노인으로서 살던 지역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함에 따라 통합돌봄을 연계하였다. 영암을케어주택(중간집)에서 퇴원 후 단기집중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복약지도, 방문운동, 주거환경 개선 등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여 현재 자택으로 복귀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안부확인 및 생활지원으로 안전하게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2 지역사회 통합돌봄 우수사례 참조

【 지역사회 통합돌봄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는 현장 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제도시행 초기 국민 인식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3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 국민인식조사 주요 결과 참고

조사 결과, 국민 다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도가 안착되면 가족돌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대는 높은 이용 의향으로도 이어졌으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국민 인지도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통합돌봄 제도 안착 시 가족돌봄 완화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기여할 것 94.7%
(본인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 의향 있음 93.8%, 이용 의향 없음 6.2%
(통합돌봄 제도 시행 인지도) 비인지 42.9%, 인지 57.1%

또한, 국민들은 ‘일상생활돌봄’이 가장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고 응답하였고, 향후 추가가 필요한 서비스로는 ‘방문재활’과 ‘임종케어(생애말기 재택의료)’ 등을 꼽아 신규 서비스 확충에 대한 높은 정책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 일상생활돌봄(42.8%), 보건의료(21.5%), 장기요양(18.1%), 건강관리(17.7%)
(추가 희망 서비스, 복수 응답) 방문재활(39.1%), 이동 및 병원 동행 서비스(31.7%), 임종케어(생애말기 재택의료, 28.1%)

아울러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제도 시행 직후부터 매주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방문 중이다. 현장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용자들은 통합돌봄 방문신청의 불편함을 주로 제기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의 지역 여건, 추진 역량과 의지에 따라 서비스 제공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는 의료·요양·돌봄 자원이 부족하여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담당자들은 예산 부족에 따른 조기 소진과 담당 인력의 업무 부담 가중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 시행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서비스 제공 현장 미니다큐·브이로그, 지방정부 우수사례를 활용한 카드뉴스·숏폼 등 다양한 SNS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방문재활, 방문영양, 간호 통합센터, 재가임종 등 신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과 운영 성과를 검증한 후 제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의료·요양·돌봄 제도를 기획·운영하는 관계기관과 조직이 모두 머리를 맞대어 서비스 간 연계와 균형을 극대화하고 서비스 빈틈을 촘촘히 메워나가고자 한다.

이용자의 통합돌봄 방문 신청의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2단계 통합돌봄 지원 전산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기능을 추가한다.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별 각종 돌봄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현황을 계량화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방정부 지역계획에 반영하여 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의료취약지와 초고령 지역 등 돌봄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특화서비스 예산을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돌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정당국과 협력하여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문가와 함께 만드는 통합돌봄 발전방안 】

보건복지부는 그간의 운영 성과와 한계를 관계부처, 지방정부, 전문가와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여 제도 개선과 정책 고도화를 지속 추진한다.

7월7일(화) 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제4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8일(수) 학계, 의료계, 지방정부, 시민사회, 언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제도 시행 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현장을 찾아 관계자 의견을 청취해 왔으며,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갈 것이다. 소통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현장 의견을 향후 정책 보완과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복e음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개선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2주간 집중 건의기간 운영한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검토 결과를 8월 이후 시도 회의 등 통해 지방정부와 공유할 계획이다.

* (집중 건의기간 운영) 7.6(월)~7.20(월), 2주간
 (건의사항 제출 방법) 행복e음 지역사회 통합돌봄 게시판

정은경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은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점이라기보다,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우수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개선 과제는 관계부처, 지방정부,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운영 현황
 2. 지역사회 통합돌봄 우수사례
 3.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 국민인식조사 주요결과

<별첨> 통합돌봄 100일 우수사례 카드뉴스

담당 부서 <총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혜은 (044-202-3580)
		담당자	서기관	이라향 (044-202-3581)
		담당자	사무관	정동민 (044-202-3586)
<운영실적>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	책임자	과 장	변성미 (044-202-3590)
		담당자	서기관	윤종현 (044-202-3592)
<대국민 인식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기획부	책임자	부 장	정용주 (033-736-1402)
		담당자	팀 장	김민경 (033-736-1490)

□ **사업운영 총괄 현황**

(단위: 명)

대상자 (단위:명)	신청·접수		조사		서비스연계	
		주평균		주평균		주평균
계	46,215	3,301	40,245	2,875	37,304	2,665
노인	45,619	3,259	39,837	2,846	37,034	2,645
장애인(65세미만)	596	43	408	29	270	19

□ **연계서비스 분석**

(단위: 건)

전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복지	기타
총 건수	123,595	11,196	24,352	15,770	53,251	12,446	6,580
비율	(100%)	9.1%	19.7%	12.8%	43.1%	10.1%	5.3%

□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현황**

연번	시도	신청자 수(명)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자
	전국	45,619	41.0
1	서울특별시	6,928	35.7
2	부산광역시	4,332	51.7
3	대구광역시	1,784	33.4
4	인천광역시	1,516	25.5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7,295	93.3
6	대전광역시	1,516	53.4
7	울산광역시	442	21.0
8	세종특별자치시	179	36.1
9	경기도	6,335	25.2
10	강원특별자치도	2,137	51.5
11	충청북도	1,522	40.0
12	충청남도	1,742	33.8
13	전북특별자치도	2,435	52.0
14	경상북도	2,925	41.5
15	경상남도	3,633	47.4
16	제주특별자치도	898	65.9

구분	주요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돌봄 사각지대 발굴·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부천시의 A씨(80대/남)는 2차례의 암수술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유일한 지지체계였던 딸마저 암 확진을 받아 돌봄이 중단될 상황이었다. A씨에게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던 생활지원사가 이러한 상황을 알고 부천시의 통합돌봄으로 연계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판정 조사를 통해 식사·영양, 건강관리, 병원 이용, 주거안전 등 복합적인 돌봄 욕구를 확인하고 부천시와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함께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하여 맞춤형 개인별 지원계획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가사지원(복지관), 병원동행지원 및 식사영양지원(자활센터), 방문건강관리 및 통합건강관리(보건소), 방문복약관리(건강보험공단), 안전바·방충망 등 주거환경 개선(자활센터)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낙상 위험을 해소하고 가족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등 A씨가 살고 있는 집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할수 있게 하였다. ○ 경북 의성군의 B씨(70대/여)는 시각 심한 장애인으로 구강암, 고혈압 등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안고 있던 중,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홀로 생활하게 되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결과 '등급외' 판정을 받았고, 구강암 수술 후 저작기능 저하 등으로 체중이 10Kg 이상 감소하는 등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배우자 상실에 따른 우울감과 노후된 주거 환경으로 낙상 위험까지 높아져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이 대상자의 위기 상황을 발견하여 통합돌봄을 신청하면서 의성군에서 B씨의 욕구를 파악하여 지원이 시작되었다. 방문진료(한의원), 방문간호(보건소), 틈새돌봄(노인복지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복지관)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보건복지부), 주거 공간 개선(종합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건강 악화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배우자 상실로 인한 우울감도 완화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 경기도 안산시의 C씨(30대/남)는 뇌병변 심한 장애인으로 요양병원에 4년간 장기입원 후 퇴원하여 근처에 살고 있는 C씨의 어머니가 전적으로 간병을 전담하고 있었다. C씨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조사로 복합적인 돌봄욕구가 확인되어 안산시의 통합돌봄으로 연계되었다. 통합판정 조사를 통해 주거, 보건의료, 일상생활 등 욕구가 확인되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인별 지원계획을 마련하였다. 이후 임대주택(GH), 장애인 건강주치

구분	주요 내용
	<p>의(의료사회적협동조합), 방문건강관리·치매안심센터(보건소), 식사지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병원동행지원(하모니콜), 이웃활동가 틈새돌봄서비스(장애인복지관) 등 서비스를 통해 장기입원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함께 완화하였다.</p>
<p>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p>	<p>○ 대구시 서구의 D씨(70대/남)은 고관절 수술을 받고 퇴원 전 병원을 통해 통합돌봄으로 연계되었다. 서구청에서 대상자 가정을 방문 중에 함께 거주하고 있던 배우자 E씨(70대/여, 뇌병변 심한 장애)도 돌봄이 필요한 대상임을 추가로 확인하여 이들 부부의 돌봄욕구를 확인하였다. 이에 퇴원환자인 D씨와 배우자 E씨의 건강상태와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구청, 의료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 함께 논의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두 부부에게 방문한방진료·방문건강관리·틀니지원(보건소), 식사지원(시니어클럽), 영양등뽕죽 지원(돌봄센터), 병원동행(재가노인센터), 방문목욕(사회적협동조합), 후원물품 전달·안부확인(주민센터), 방문운동(물리치료사협회), 방문복약지도(건강돌봄단), 주거환경개선(보건대학교·주거복지협동조합) 등 서비스를 연계하여 부부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퇴원환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을 지원하는 동시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가족 단위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p> <p>○ 전남 영암군의 F씨(80대/여)는 목욕탕을 다녀오다 농수로 아래로 낙상해 갈비뼈 골절 등을 입고,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경기)의 병원에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F씨는 살던 지역으로 돌아와 생활하기를 희망함에 따라 자녀가 통합돌봄을 신청하였다. 영암군은 독거노인인 F씨가 퇴원 직후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약물 관리와 주거 환경 개선 등 추가적인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영암올케어주택(중간집)에서 약 한 달간 생활하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퇴원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재가노인복지센터)를 제공받아, 퇴원 후 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또한 방문 복약지도(약사회), 방문맞춤운동지도(사회복지서비스연구소),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신북면)에서 안전바, 마루 입구 저계단식 난간대 등을 설치하였고 중간집에서 자택 복귀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부 확인과 생활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F씨가 집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게 되었고 컨디션도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p>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 국민인식조사



구분	일반국민	중장년층
조사 모집단	전국 만 18세 ~ 79세 성인남녀 4,178만 명	전국 만 40세 ~ 79세 성인남녀 2,860만 명
표본 크기	만 18세 ~ 79세 일반국민 2,000명	만 40세 ~ 79세 중장년층 500명
표집 방법	2026년 5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근거 지역·성·연령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표본 오차	신뢰수준 95%에서 ±2.2%p	신뢰수준 95%에서 ±4.4%p
조사 방법	온라인조사	
조사 기간	2026년 6월 15일 ~ 6월 19일 ... 총 5일간	
조사 기획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	
조사 수행	(주)엠브레인리서치	

※ 본 조사의 경우 조사완료 응답자 특성이 표본설계의 지역, 성, 연령 구성과 동일하게 완료되어 가중값이 적용되지 않음

현재 가족 돌봄에 대해 인식(중장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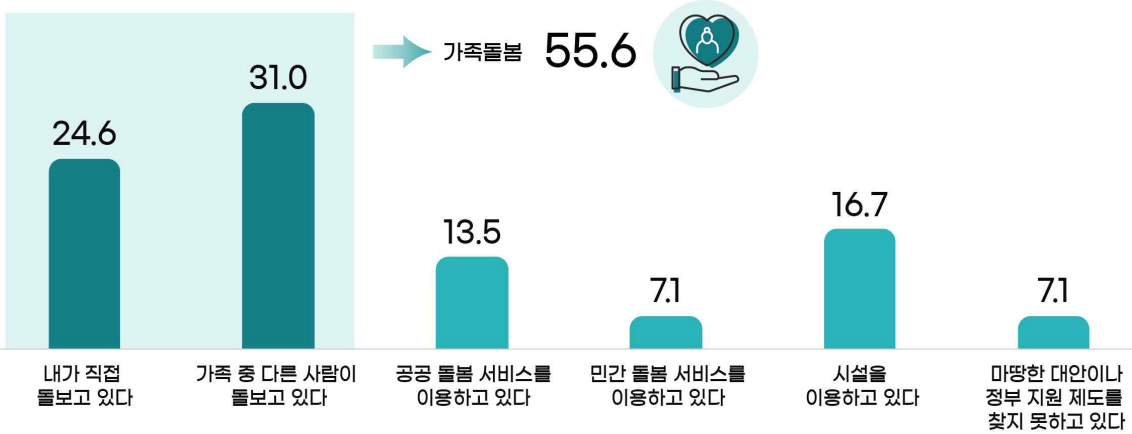
가족 중 돌봄 필요한 사람 유무

n(중장년층 전체)=50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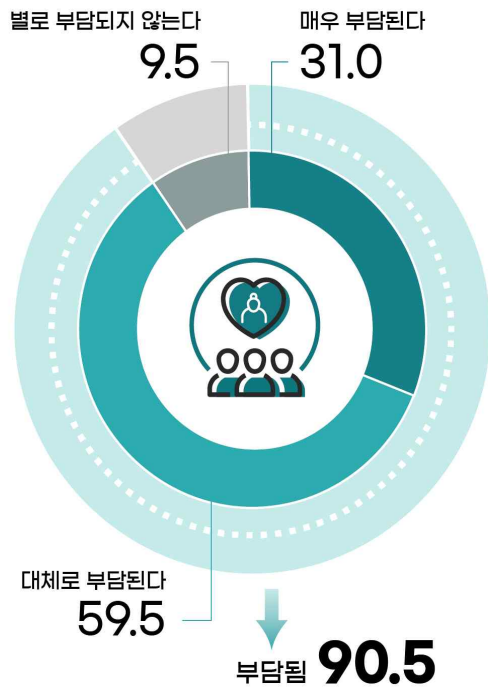
현재 가족 돌봄 방식

n(돌봄 필요한 사람 있음)=126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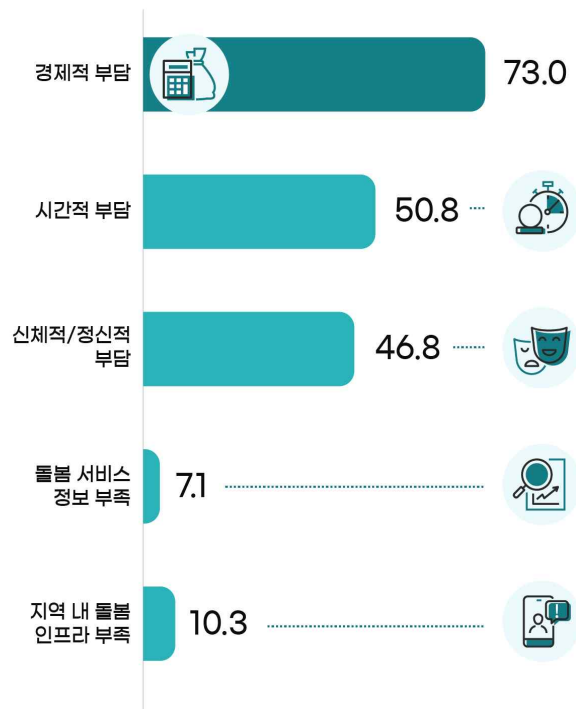
현재 가족 돌봄에 대해 느끼는 부담 정도

n(돌봄 필요한 사람 있음)=126 (단위 : %)



현재 돌봄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1+2순위 기준)

n(돌봄 필요한 사람 있음)=126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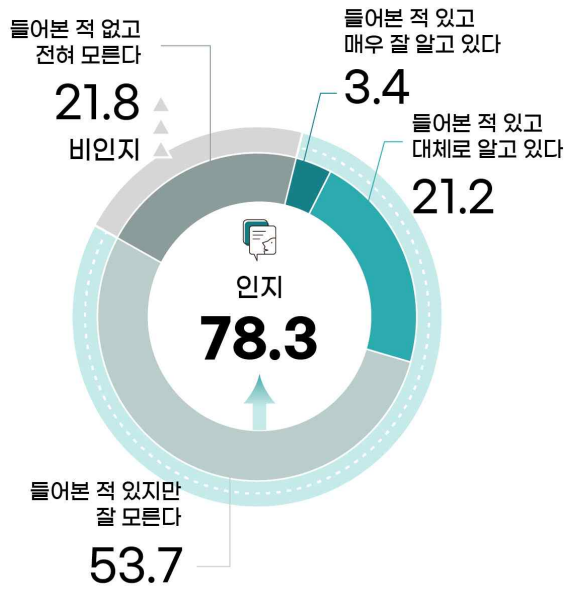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인지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지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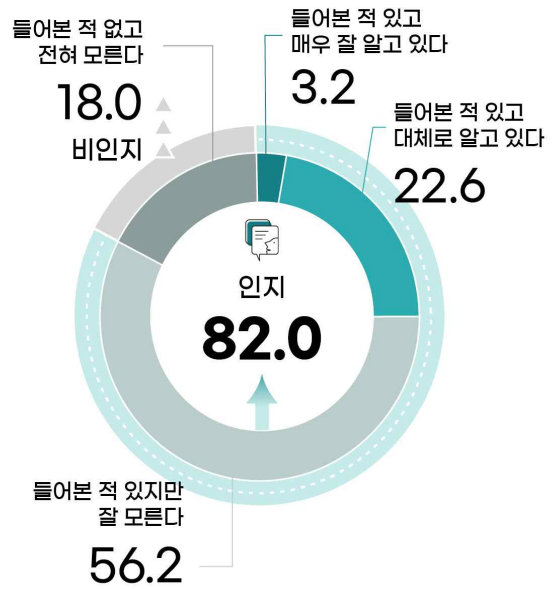
일반국민

(n=2,000)



(n=500)

중장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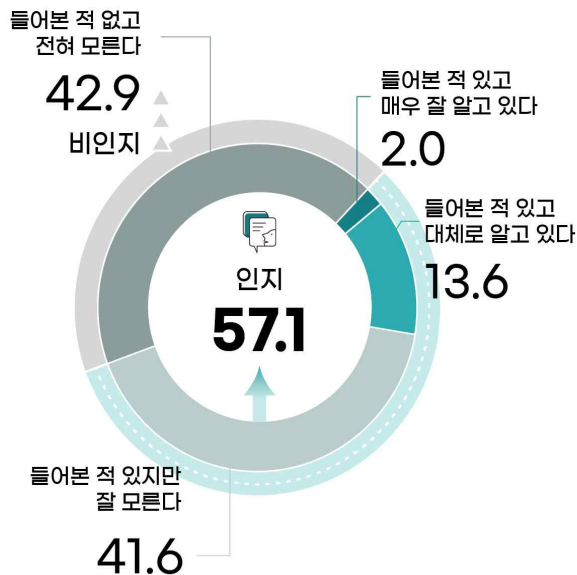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시행 인지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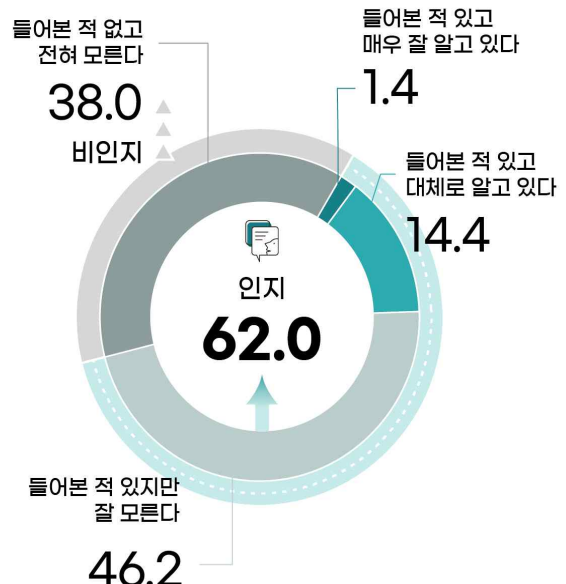
일반국민

(n=2,000)



(n=500)

중장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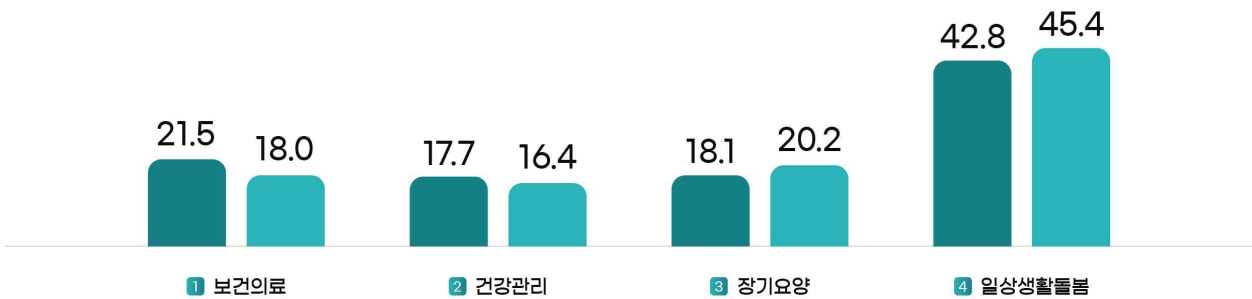


지역사회 통합돌봄 4개 서비스 분야 중 향후 가장 도움이 될 서비스

■ 일반국민(n=2,000) ■ 중장년층(n=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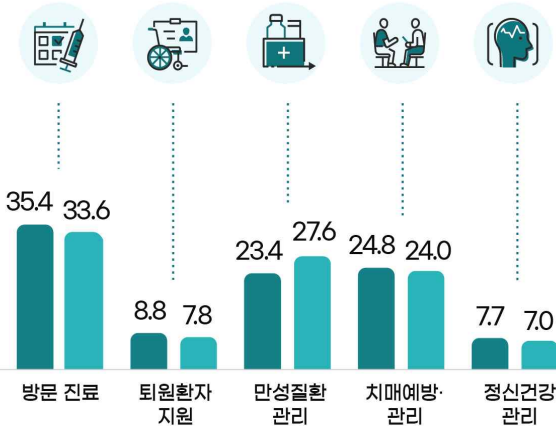
지역사회 통합돌봄 4개 서비스 분야 중 향후 가장 도움이 될 서비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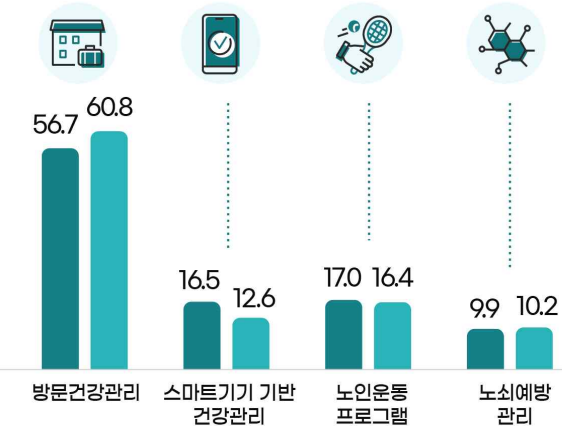
1 보건의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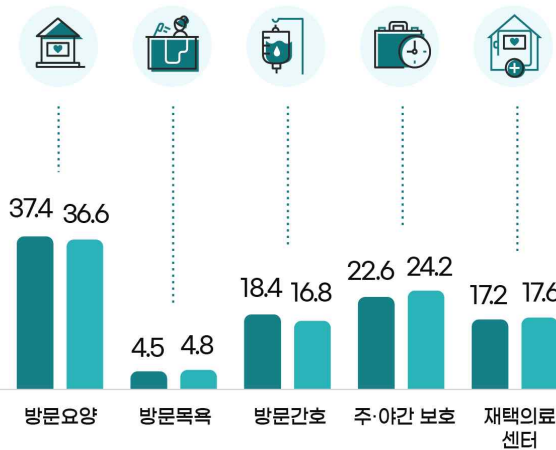
2 건강관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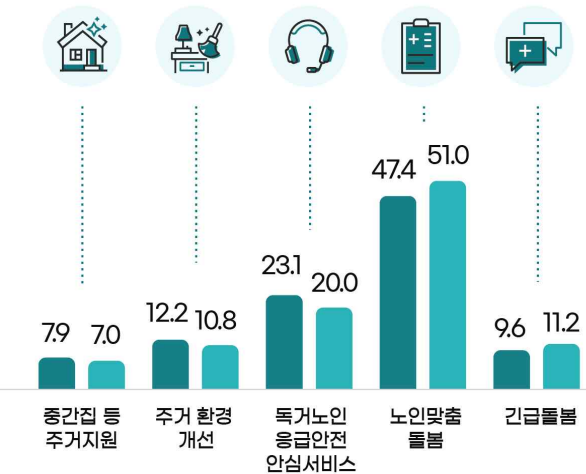
3 장기요양

(단위: %)



4 일상생활돌봄

(단위: %)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 서비스 이외에 희망하는 추가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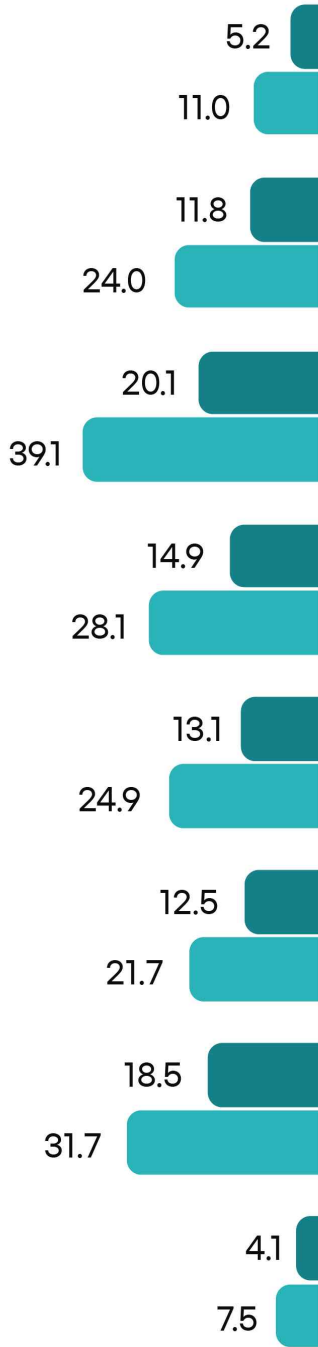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 서비스 이외에 희망하는 추가 서비스

(단위 : %)

■ 1순위 ■ 1+2순위

일반국민

(n=2,000)



복약지도



방문영양



방문재활



임종케어



가족돌봄청년 맞춤형 지원



시니어 문화·예술 처방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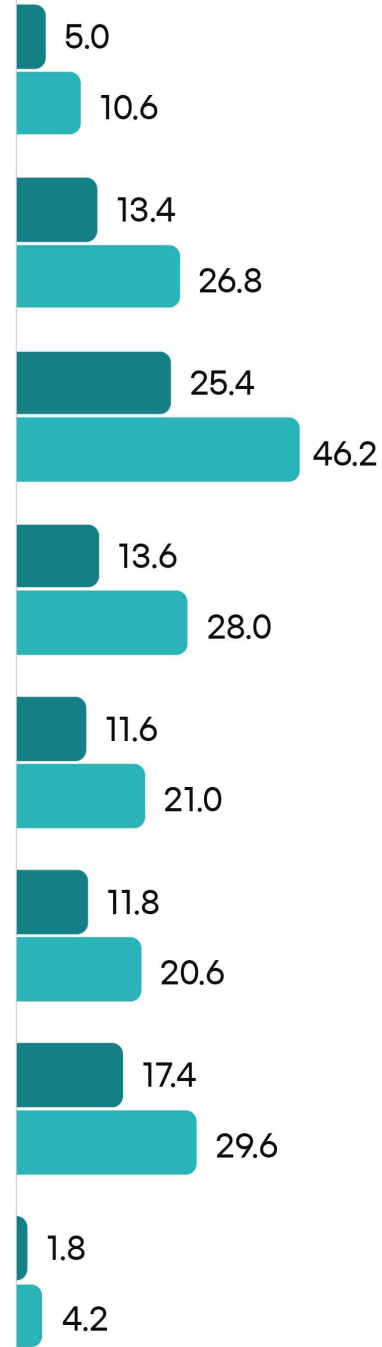
이동 및 병원 동행 서비스
(전국단위 통합 이동·교통 플랫폼)



반려동물 매개 돌봄 및 위탁 서비스

(n=500)

중장년층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